

**더불어  
민주당**  
정책위의장 **진성준**

## 첨부1 더불어민주당 '5대 국민 민생 입법' 목록

	법안명	주요내용
1	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법/ 채무자회생 및 파산 법 2200253, 2200254/민형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광주·대전·대구에 회생법원 설치</li> <li>- 광주·대전·대구고등법원 권역의 회생 및 파산사건을 광주·대전·대구에 신설되는 회생법원에 신청</li> </ul>
2	서민금융지원법 2200222/위성곤2200443/김현정 2201064/천준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신용회복 채무조정 대상에 비금융채무 포함 (통신비, 건보료, 학자금, 유틸리티비용 등)</li> </ul>
3	은행법 2200335/민병덕 2200068/오기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산금리 산정시 부당전가되고 있는 법적비용 제외(교육세, 예보료, 출연금 등), 세무항목 공시 강화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 명시</li> <li>- 최저생계비 이하 금액 압류 금지하는 은행 생계비계좌 개설 근거 마련</li> </ul>
4	주택금융공사법 22000341/민병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주공공 주택담보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명시</li> </ul>
5	대부업법 2201517/민병덕 2202172/윤준병 2202821/박성준 2202893/천준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등록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 이상의 금리를 수취한 경우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계약에 대해 이자약정 전부 무효화</li> <li>- △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에 대해 이자계약 전부 무효화, △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</li> <li>- △대부업자 최소 자기자본 요건 1억원으로 상향, △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이자계약 부분 무효화, △불법대부업자의 경우 계약 전부 무효화 등</li> <li>- △미등록대부업자의 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, △위법 대부업 행위에 대한 벌금형 10배 상향</li> </ul>
6	전자금융거래법 2202678/김남근 2202845/김현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금융당국이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도 허가</li> <li>- 전자금융업자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</li> </ul>
7	온라인플랫폼법 2200371/오기형 2200945/민형배 2201416, 2201430/김남근 2201432/박주민 2202594/김현정 2201709/서영교 2202983/오세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온라인 플랫폼 공정시장 구축,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법</li> <li>- (갑을) 대형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금지, 자율적 거래질서 개선 및 상생협력 의무 부과</li> <li>- (독과점)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기준 설정</li> </ul>
8	가맹사업법 2201000/민병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맹점사업자 단체등록제와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시 가맹본부가 이에 응할 의무 신설</li> </ul>
9	조세특례제한법 2200556/임광현 2200833/안도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한 비과세혜택 부여</li> <li>-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</li> </ul>
10	양곡관리법 2201996/임미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기능과 역할강화</li> <li>- (사전수급조절)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도입, 농타작 물재배지원 근거 마련, 선제적 수급조절사업 지원</li> <li>- (위기대응) 위원회가 정한 기준가격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등 시 시장격리·정부양곡 판매</li> </ul>
11	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2202041/어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가격폭락 대비) 쌀 및 주요 농산물에 대해 적정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달 시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</li> <li>- (가격폭등 대비)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소비자 보호 : 계약재배 목표 및 이행계획 수립, 계약재배 이행지원제도 도입, 소비자 보호 조항 추가 등</li> </ul>

12	<b>농어업재해대책법/재해보험법</b> 2202102/윤준병 2202114/이원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최대한 보조하고 피해에 따른 일상으로 회복 지원</li> <li>- 재해보험 제외 대상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 촉진, 재해범위에 병충해 포함, 상품 미출시 등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, 심의회 기능 강화, 손해평가인의 전문성 제고</li> </ul>
13	<b>필수농자재지원법</b> 2201922/이개호 2201576/어기구 2201290/김한규 2200914/윤준병 2200531/문대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가와 지자체가 농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비료, 사료, 기름, 전기료 등 필수 농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</li> </ul>
14	<b>소상공인지원법</b> 2200223/민병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상공인·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</li> </ul>
15	<b>아동수당법</b> 2200147/전진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현 만8세 미만 모든 아동에서 만1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및 아동 1인당 지급 수당액을 현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</li> </ul>
16	<b>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운영법/지역의사양성법</b> 2201301/박희승 2200772/김원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</li> <li>- 지역의 필수·공공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</li> </ul>
17	<b>과로사예방 및 근로시간단축지원법</b> 2200671/박해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과로사 정의 도입 및 국가 등에 방지 대책 추진, 사업주가 법정 근로시간 단축시 지원(실노동시간 단축)</li> </ul>
18	<b>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</b> 2201652/박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연장, 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액의 2/5 이상 지급(저소득구직자 지원법)</li> </ul>
19	<b>화물자동차운수법</b> 2201357/이연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, 안전운임제를 산업현장에 정착시켜 화물운송 안전을 증진</li> </ul>
20	<b>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법</b> 2200108/김운덕 2202233/이춘석·권성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</li> </ul>
21	<b>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 삶의질향상지원법</b> 2200252,2200658/진성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주체의 입주자 수요조사 주기적 실시 및 그 결과에 따라 복리시설의 용도를 변경</li> <li>-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용 목적으로 사용한 관리비 및 사용료를 국가가 지원</li> </ul>
22	<b>민주유공자법</b> 2200274/전재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</li> </ul>